



# 호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일정 및 계획

금년 3월중 교토의정서를 본격 발효한 호주정부는 2010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일정 및 계획을 발표함.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가계 및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함.

- 금년 3월 교토의정서(Kyoto Protocol)를 공식 발효한 호주정부는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(ETS)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세부일정 및 계획을 발표함.
  -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전세계 27개국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3,700만 톤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두 배를 넘어섬.
  - 2013년부터는 개발도상국도 교토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규모 및 이행 국가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현재 호주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.5%를 차지하고 있으나,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에 육박함.
  - 호주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호주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2000년 수준의 60%로 감축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친환경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음.

〈표〉 주요 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

(단위 : 백만 톤, 백만 달러)

	2006		2007			
	거래량	거래규모	거래량	연간증가율	거래량	연간증가율
EU ETS	1,104	24,436	2,061	87%	50,097	105%
New South Wales	20	225	25	26%	224	-1%
Chicago Climate	10	38	23	124%	72	90%
UK ETS	na	na	-	-	-	-
합 계	1,134	24,699	2,109	86%	50,394	104%

자료 :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, World Bank

- 호주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연간 탄소배출량이 25,000톤 이상인 1,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규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.



- 우선 교토의정서에 의해 호주에 할당된 연간 탄소배출 허용량 중 70%를 1톤당 20 호주달러 가격으로 경매를 통해 해당 기업에 매각하고 점차 경매규모를 100%까지 확대할 계획이며, 경매가격은 당분간 매년 4% 상향조정할 예정임.
- 탄소배출권 경매에 따른 정부의 수익이 연간 약 200억 호주달러(190억 달러)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, 호주정부는 이를 탄소배출량 규제로 인해 비용부담이 가중된 가계 및 기업들에게 환원할 방침임.
- 경매 이후 거래는 일반 선물거래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, 이 과정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감축에 성공한 기업들의 경우 이에 따른 재무적 이익이 동반될 것으로 기대됨.

■ 그러나 탄소배출량 규제 시행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및 기업 비용부담 증대 등이 경제성장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- 호주의 경우 전체 전력생산의 90% 이상을 화력발전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제도도입 1년동안 전기료가 16%, 2020년에는 현 수준에서 40%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료비도 제도도입 1년내에 약 9%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 1톤당 20 호주달러로 거래될 경우 제도 도입 후 1년간 소비자물가가 0.9%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, 경제성장세 둔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.

■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과 가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.

-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의 해외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매출 1백만 호주달러당 탄소배출량이 2,000톤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허용량의 최대 90%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계획임.
-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자동차운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연료비 상승분에 상응하는 세금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.
- 또한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보상 및 지원과 함께 제한적인 해외 탄소배출권 수입을 허용할 방침임.
- 또한 'Climate Change Action Fund' 를 조성하여 제도도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된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임.
- 한편 탄소배출권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농업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탄소배출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.
- 호주 정부는 오는 10월중 구체적인 탄소배출 허용치를 공표할 예정이며 12월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짐. **KIF**